

일제 군사시설 총체적 조사 필요

태평양전쟁 당시 4만여명 강제 동원... 갯도 등 구축

이윤형기자 기자

입력 : 2008. 02.28. 00:00:00

정부 차원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갯도진지 등 군사시설물 조사와 함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는 최근 펴낸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노무·병력 동원에 관한 조사' 직권조사보고서를 통해 "제주도는 그동안 수많은 오름 등에 갯도진지 등 일제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와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는 또 증언채록 등을 토대로 당시 제주도민 4만 명 정도가 노무동원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혀 일제하 강제동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갯도진지 등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에 도민 뿐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까지 징용돼 열악한 여건에서 노동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제주도의 경우 아직도 갯도진지 등 일본군 군사시설이 밝혀지지 않은 곳이 많고, 또 상당부분 훼손되고 있지만 한라일보 등에서 많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총체적인 발굴과 함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진상규명위 차원에서 2005년 12월 제주도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처음 펴낸 성과물이다.

본보 특별취재팀은 2005년부터 4년째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 탐사보도를 통해 태평양전쟁 시기 구축된 일본군 군사시설 실태와 주둔실체 규명 및 현장인터뷰 등을 내보내면서 당국차원의 조사 및 보존방안을 집중제기하고 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